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배 의 철 |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

I. 도마 위에 놓인 병역 거부권

한국 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문제는 50년간의 한국 현대사에서 한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었다. 30여 년이 넘게 군부 독재가 연속되어 온 한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속에서 군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내재화된 레드 콤플렉스'처럼 한국인들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 투사들을 잡던 판동군 장교 출신의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적'을 만들어야 했으며 그것은 공산주의로 명명될 모든 자유의 탄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에 의해 국가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대신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군대는 독재 정권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 박정희에 뒤이은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자신들의 권력을 보좌해 주는 군대를 불가침의 성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권 유지의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군대에 대한 발칙한 문제 제기는 2001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2001년 12월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다. 오태양씨는 불교의 불살생의 계율과 평화의 이유에 의해 공개적으로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국한된 것으로 사이비 취급을 받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특이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들의 것임이 알려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연대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2002년 7월 9일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을 이유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종교를 넘어서 인간의 보편적인 평화를 위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 '너도나도 군대를 거부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에서 '양심은 없고 거부만 남았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나?'는 이야기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민감하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무조건 배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아니며, 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양심에 대한 병역 거부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병역 거부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면서 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 내고,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II. 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가

1. 가치판단이 될 수 없는 '양심'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

흔히 양심이라 하면 무엇을 떠올리는가?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양심의 가책, 혹은 길에 쓰레기를 몰래 버렸을 때의 양심? 흔히 우리들의 머리 속에 양심이란 개인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내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언가 정도로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양심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양심은 '좋은 마음',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이며, 또한 일상의 사소한 사건들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기반을 이루는 존립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은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흔히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양심에 대해 '좋은 마음'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양심적/비양심적 병역 거부를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 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양심'의 범위를 확장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의 증인이 말하고 있는 집총거부권은 종교적 교리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리가 폭력과 살상에 반대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말할 때 '양심'이 의미하는 바는 종교적 양심에서 정치적 양심으로, 또 개인의 양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 개인에 대한 억압과 통제로서의 안보논리와 군사주의를 반대한다

초등학교 시절, 민방위 훈련. 사이렌이 울리면 입을 막은 채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유 없이 열지어 복도를 뛰어다니던 기억은 전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은 많이 약해졌지만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조건은 '분단 상황'이다.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한 마디로 남한의 많은 것들이 용인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 등은 전쟁에 대한 공포, 전시 상황을 각인시키는 일상적인 기제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반대하는 목소리 중 공동체 보호와 안보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안보란 것은 외부적 안보로 국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지배 체제를 합리화시켜 내는 외부적 안보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평화를 사고해야 한다.

국가간 무기 경쟁을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최신형 무기 도입은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쟁국의 경쟁적 무기 도입과 그에 따른 악순환은 곧 그 지역에 일상적 전쟁 상황을 초래하며, 그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안보 이데올로기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통제와 규율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군대 그 자체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군대는 한 개인이 20년간 사회에서 배우고 습득했던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게 하고,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도구적인 인간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다. 신병 훈련소에서는 탈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양심 사상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군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부대 배치 이

후의 훈련, 병영 생활은 계사회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군대 질서를 몸으로 체화 체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군사주의는 군대 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정치적, 일상적 생활 영역 속에 자리 잡고 있다.

3.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불평등의 기제로서의 군사주의를 반대한다

군사주의 문화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벌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가부장제 패러다임 내에 존재하는 '폭력적 남성성'의 신화를 특정 사회(군대)의 보편적 가치체계로 재생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된 군사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제약하는 집단적 규율 상황의 연장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선배가 후배를, 남성이 여성을,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비장애인인 장애인, 진짜 가짜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동시에 후배,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가짜라는 사회적 약자는 주체성을 상실하며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군대문화가 가부장제와 결합되면서 병역의 의무는 한국 사회라는 시민공동체의 시민권에 대한 통과의례의 역할을 해 왔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다른 '남자'로서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과정이 바로 군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와서 철들었다'는 말은 이런 것을 뜻한다. 한편 '군대 갔다 오면 바보 된다'라는 류의 군대에 대한 패해의식 역시 군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정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제자들, 혹은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으로 귀결되곤 한다.

가부장제 국가는 여성을 국가 공적 부문에서 완전히 배제시킨 채 한 가정에 예속시켜 사적 존재로

소외시키며, 남성은 국가권력 유지를 뒷받침하는 생산과 국방을 담당하는 공적 존재로 양극화 시켜 왔다. 이러한 배제의 메커니즘 속에서 전형적인 군사주의 조직인 군대는 군사주의의 위계화와 성별화된 가치체계를 재생산하는 주요 기관으로 존재해 왔으며, 이런 측면에서 군대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병역의 문제는 단지 제도를 고치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안보, 통제와 배제, 가부장적 군사문화의 재생산, 공동체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군사주의, 안보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반전평화운동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군무기의 현대화'를 병역인력 축소의 배경으로 제시하였고, 대만의 인권운동가들은 '대체복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군현대화 카드'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차마 총을 들 수 없다'는 양심에 따른 주장이 '간접 대량살상용' 버튼 작동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오히려 지원병들이 병역과 전쟁을 선택했다는 지위로 인해 더욱더 비인간적인 폭력과 살상 속에 내몰릴 수도 있으며 이 때 그들이 자신의 양심과 배치되는 판단과 선택을 하 기관 더욱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미는 전쟁에 반대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추구하고 폭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로서 평화주의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Ⅲ.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아직 한국은 소수자의 양심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양심과 사상의 문제를 개인이 희생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만큼 자기 동일성을 파괴하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수많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을 포기하기보다는 감옥행을 택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발상이라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군복무를 강요하거나 처벌을 당연시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

병역의 의무가 사회에 대한 봉사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사회봉사 또한 동일한 맥락에 위치 지어져야 한다. 군대에서 전투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힘든 일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짐차로 '빈민개병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의 열악한 현실은 그 자체로 개선해야 하는 문제이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게 양심을 박탈한 채 너도 힘든 군대 생활을 해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 방식이 아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군대를 운영하고 또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군대라면, 군대의 열악한 환경은 마땅히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 너도 나만큼 힘들어야 한다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야만'일 뿐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수가 군대를 간다는 점에서—그

러나 이 다수는 남성이다—사람들은 병역의 의무를 합리화하고 있다. 군대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 장애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배커니즘도 이로부터 발생한다. 정작 국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다수자들은 소수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군대와 국가에 부여된 신성성은 일제가 전시 동원체제에서 사용했던 국가적 세뇌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이다. 군대의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의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지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장애인, 여성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와 군복무를 한(혹은 하게 될) 사람들은 연대해야 할 관계이지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과 군대 내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불가침의 영역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군대의 법칙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함께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를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모색하는 과정에서 병역 거부자들의 권리와 군대 문제는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남성들간의 연대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다를 수 있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를 수 있음이 인정되고 이것이 하나의 질서를 이루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배척해야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반전 평화 운동의 측면을 가진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지닌다. 다를 수 있는 자유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는 보다 소수에게 열린, 그리고 다수와 소수가 함께 할 기반이 형성된 그런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민**